

한·중 서울 정상회담(8·25) 평가

최 춘 흙

국제관계연구실 선임연구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북경올림픽 폐막식 다음날인 8월 25일 1박2일이라는 바쁜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고,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이튿날 김형오 국회의장, 한승수 국무총리, 경제계 인사들과 면담하였으며 여수 세계박람회 준비기관도 방문하였다.

8월 8~24일 개최되는 북경올림픽 참가 직전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한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일정에서 한국을 제일 먼저 방문하여 8월 6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전략적 동맹관계의 공고함을 재확인한 바 있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도 북경올림픽 폐막 다음날 3개국 순방에 있어 8월 25~26일 한국을 먼저 국빈 방문하여 한·중 수교 16주년을 경축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하는 여러 방안에 합의하였다.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북경올림픽을 전후로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 향후 동북아 및 한반도 안정유지에 긴요하다고 판단한 데 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에서 대미·대중 관계가 점진적으로 심화·발전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고 있다.

이번 한·중 서울 정상회담은 양국관계사에 있어 이정표를 마련하는 매우 의미 깊은 정상회담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내에 한·중 양국 정상 3번이나 만나 정상간에 친밀감이 더욱 깊어지게 되었고, 상호 이해와 협력 방향이 폭넓게 합의됨으로써 향후 한·중 양국관계가 더욱 전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한·중 서울 정상회담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 정상은 양국관계를 전략적인 방향으로 심화 발전하기 위해 정치, 경제, 인적문화, 지역 및 국제 협력 분야에 걸쳐 다방면에서의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 금년 5월 한·중 북경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과 27억 달러 규모의 대중 투자 각서를 포함한 8개의 한·중 양해 각서가 체결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8월 서울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과 2010년 내 2,000억 달러 교역달성과 정치분야 5개, 경제분야 17개, 인적 문화교류분야 6개, 지역 및 국제협력 분야 6개 등 총 34개의 합의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이 중에서도 양해각서 혹은 약정서가 7개나 되었다. 이는 한·중 양국이 실질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에 합의함으로써 양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둘째, 한·중 양국은 군사 교류 확대와 양국 외교부가 주도하는 전략대화의 상설화에 합의하였다. 그동안 한·중 양국은 경제교역과 협력 규모에 걸 맞는 군사교류협력이 저조한 점에 공감하여 왔다. 향후 양국은 '전략적'으로 군사분야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대남 위협을 사전에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반도 안정과 평화유지 및 역내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중국은 한국정부가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한다는 입장에 지지를 표명하고, 특히 평화통일 실현을 지속적으로 지지한다고 재천명하였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이 한국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북한을 권고하여 왔다. 북경올림픽 영도소조(領導小組)의 조장(組長)이며 차기 국가주석으로 예상되는 시진핑(習進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올해 초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과 회담하고 개성공단도 방문하여 남북 경제협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주시시킨 바 있다.

넷째, 양국 정상은 북핵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적이고 균형있는 이행을 촉진시키고 9·19 공동성명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건설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한·중 양국은 미·북간 협의가 조속히 타결되기를 촉구하였으며, 향후에도 북핵문제를 6자회담 틀 내에서 한·중 양국이 협의와 협력을 강화할 것에 다짐하였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한·중 양국이 국제인권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탈북자의 송환문제를 국제인권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실제로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에 송환하는 문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많이 받아 왔다. 중국이 북경올림픽 직후 국제인권문제를 대화와 협력으로 다루겠다고 한·중 공동성명에서 표방한 점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요약하면, 이번 공동성명에는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실천적인 정책추진 내용이 많아 향후 한·중 양국관계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된다. 특히 한국정부는 중국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한다고 재천명한 점에 주목하여 앞으로 미래지향적이며 전략적인 사고를 통해 중국과 폭넓고 깊은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기를 놓쳐 중도에 그만 두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는 말이 새삼스레 떠오른다.

